



참여연대 제15차 정기총회

일시 2009년 2월 21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YWCA

자료집 순서

2008 사업보고

4	2008 종합보고
11	2008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30	2008 연대사업 보고
34	2008 부설기관 보고

2008 감사보고

38	사업감사 보고
40	회계감사 보고

안건1. 2009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44	2009 종합 활동계획
46	2009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안건2. 2008 결산 및 2009 예산안 승인의 건

58	2008 결산
64	2009 예산

안건3. 2009 임원인선안 승인의 건

64	2009 임원인선안
----	------------

부록

68	참여연대 정관
72	참여연대 기구표
73	참여연대 노래

2008 사업보고

2008 종합보고

이명박 정부 1년, 민생은 더욱 악화되었고 한국이 자랑하는 민주주의도 고사될 위기를 맞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또 다시 대결과 긴장의 관계로 돌아섰음. 어려운 정세와 여건 속에서도 참여연대는 2008년 한 해 다양한 경제, 민생현안 대응, 권력감시 활동, 외교안보 정책 감시, 국내외 연대활동을 지속하였고, 활동방식의 쇄신과 시민소통, 회원집중 강화 등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명박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을 대응하는데 있어 불가피하게 정부 정책을 반대 혹은 저지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었음.

촛불정국에 있어 참여연대의 고군분투, 총력 집중은 유무형의 활동의 성과를 남겼지만 동시에 조직적 손실과 많은 성찰의 과제를 남겼음. 또한 2008년 참여연대 활동은 등록금 대응과 하반기 민생대안 제시활동 강화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활동의 집중점, 역동성을 보였다고 하기 어려움. 소통의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려는 노력들이 꾸준히 시도되었으나 현장성 있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거나 패턴화된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미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2008년은 민생분야 정책대안 마련과 참여연대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준비기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 즉 예상치 못한, 혹은 준비되지 않은 현안들에 대한 산발적이거나 부서별 대응의 한계는 활동 의제에 대한 집중력과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조직 재편과 활동방식 변화를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편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과 전임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 소통의 부재와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압박 등의 양상은 계획했던 2008년 활동기조와 사업계획에 집중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었음. 향후 정세판단과 전망, 이에 부합하는 활동계획이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음.

2008년 5대 활동방향에 따른 사업별 평가는 다음과 같음.

사회경제개혁 분야

2008년 주요계획

- 삼성 불법규명과 사회적 책임 촉구활동
- 영세상인, 중소기업 정책대안 마련
- 친재벌 경제노선과 경제, 금융정책 후퇴 저지
- 3대 가계부담 (교육, 주거, 의료)완화 통한 민생안정
- 사회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해소

상반기에는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을 계기로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행위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삼성의 거짓말 보고서>를 통해 실체를 알리는 활동에 집중했음. 특검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속된 참여연대 활동이 이건희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삼성 전략기획실 전격 해체, 이재용 씨로의 경영 후계 구도 지연 등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후 삼성 불법행위 대응 활동 10년 평가 및 정리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음.

정부의 친재벌 정책 특히 금산분리 완화나 출총제 폐지 등 재벌정책 및 금융정책 퇴보 저지활동을 지속했으나 대중적 공론화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고환율 정책과 경제위기 대응 실패에 대한 경제관료 책임 추궁 활동, 정부와 여당의 감세정책 특히 중부세 무력화 시도에도 집중 대응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통합 등 금융조직 개편 저지 활동은 주로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3단체 연대활동으로 이루어짐. 대기업들의 담합에 따른 중소기업, 소비자 피해방지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거의 진척을 이루지 못함.

민생 현안 중에는 교육비, 주거비 문제에 집중했음. 특히 등록금 문제, 부동산-주거비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프로그램이나 언론기획, 등록금 네트워크와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민생민주국민회의 등을 통한 연대활동을 통해 대중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했음. 그 밖에 대부업법 문제, 단단계, 도박, 물가인상 문제 등 여러 민생 이슈들에 대한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했으나 즉자적 대응도 없지 않았음.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후퇴 즉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 보험 도입, 보육료 자율화 등 의료복지 시장화 반대 활동에 집중했음. 영화 식코 보기나 복지학교 등 기획사업이 시도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금개혁, 보육 바우처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현안 대응이 주요활동 내용이었음.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은 취약했다고 할 수 있음. 취약 노동자 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노동히어로 표적집단 면접(FGI)>가 시도되었고, 개별 사업장 노동현안에 대한 연대활동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이어지지 못했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관련 공기업의 CSR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CSR 기획강좌 등이 시도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에 대한 공론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권력감시 분야

2008년 주요계획

- 국회/정당/의원 밀착 감시
- 검찰, 법원 감시 및 제도 개혁
- 정-관-경 개발동맹 실제 드러내기 등 관료감시 활동

총선관련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공개 활동과 온라인 <18대 총선 토론 배틀>이 진행되었으나 18대 총선에 대한 조직적 기획사업은 진행하지 않았음. 총선 이후 바뀌진 의회 지형에 직면하여 구체적인 의회 전략을 세우지 않고 부서별로 현안대응과 국감대응이 이루어졌음. 정기국회 정책과제나 국감과제 발표 활동은 지속되었으나 애초 계획했던 친재벌 경제, 금융정책과 민생정책과 관련된 의원, 정당 모니터링 활동이나 정당정책 비교평가 활동은 미진했음. 연말 22개 MB악법 선정, 악법 최다 발의의원 선정을 통해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야당과 함께 MB악법 저지운동을 전개한 것을 계기로 민생, 민주주의 기본권 관련 의원, 정당 정책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본격화하고 있음.

삼성기름유출사건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이 진행되었고,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언론, 표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정부 정책에 저항하며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시리즈> 제작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저지활동을 전개했음.

법조윤리와 검찰태도와 관련하여 내실있는 보고서를 9차례나 발표했음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이율배반 보고서(8월), △헌재 20년, 헌법재판소 구성원 분석 보고서(8월), △뇌물죄 양형사례 조사발표(9월),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근무 보고서(10월), △검찰의 촛불집회 폭력경찰 고소 사건 수사 방치 조사발표(10월), △퇴직 법원장들의 비윤리적 사건수임 보고서(7~10월), △한국 무변촌 실태와 일본의 모범사례 보고서(7월~12월), △인권침해 악법 발의 법률가 의원 보고서(11월~12월), △재심 무죄 판결을 통해서 본 검찰의 과거 잘못 보고서(9월~10월))

그 밖에 사법개혁 관련 국민참여재판 활동 모니터링과 시민의 이해와 관심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청활동이 진행되었음. 토론회 등을 통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나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입장 마련은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이어졌음. 그러나 인력부족으로 애초 계획했던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되지 못하고, 검찰의 정치적 편향 및 민주주의에 반하는 수사권 행사에 대한 집중력 있고 기획된 활동은 미흡했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수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적절한 정부 조직개편, 부적격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집중 대응이 있었음. 쇄고기 협상관련 관료감시보고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퇴직후 취업제한 보고서>, <장관인사와 인사청문회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등 5차례의 관료감시보고서를 발표했음. 쌀 직불금 파동과 관련 논 보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명단 공개 활동이 있었으나 추가적인 대응은 하지 못함. 그 밖에 애초 기획했던 관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진행하지 못했으며,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정보공개법 개정 등 제도개혁운동도 일상적 대응 수준에 그쳤음.

평화, 국제 분야

2008년 주요계획

- 통일외교안보정책 감시 및 대안적 정책방향 제시
- 국방정책 감시기반 구축
- 국제평화연대와 소통강화
- 대중적 평화운동 지평 확대

정부 출범에 맞춰 의견서와 연속 토론회 등을 통해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상황악화에 대한 기본입장과 정책전환 촉구 활동을 진행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한국군 파병 정책, 방위비 분담금, 국방개혁,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입장, 의견서 등은 정부, 국회, 평화단체 내에 유의미한 입지를 확보하고 충실한 자료 제공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체계적인 국방예산 및 무기 모니터링을 시도해보고자 했으나 인력부족 등으로 국방연구 연속 세미나 개최이외 구체적 진척이 없었음. 그나마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정책과제 발표, <국방개혁20> 평가와 과제, 국회 국감 국방위원회 모니터링, 2009 국방예산의 문제점 발표 등 초보적인 대응은 유지했음. 퇴행적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반전 평화행동, 한일 갈등의 쟁점 이해를 위한 알통강좌, 분쟁이해를 위한 평화학교, 김영미 PD 강연, 미 대선관련 강연 등 다양한 시민교육,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한반도와 국제 평화 이슈를 망라한 <2008 평화백서> 발간했음. 국내연대는 평화활동가 대회 등 기획된 프로그램 이외 사안별 연대활동을 함으로써 소모적 연대를 많이 줄였음.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에 있어 인도네시아 ODA 연구기행, ODA정책보고서 발표, 국제원조감시단체와 ODA 보고서 공동 제작 활동이 있었음. 그러나 국내 ODA기본법 제정에 관한 일상적인 정책 모니터

링 활동은 미흡했음. 아시아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연간기획으로 아시아 포럼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진행하였고, 칼럼 <아시아 생각>을 모은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와 버마번역서 『양지를 찾는 사람들』 출판함.

국제연대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제교류와 방문이 지속되었음. 일본 헌법9주 세계대회, 2008민간아셈포럼, 포럼아시아 지역인권옹호자 포럼 (3rd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포럼아시아 ASEAN Peoples' Forum, 안프렐 아시아 선거감시단 활동, 국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가함. 한국-독일 미군기지 관련 세미나, 평화국가 만들기 한일 국제회의 개최,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유엔 및 아시아 인권단체와의 연대활동이 진행되었음.

시민참여 분야

2008년 주요방향

- 운동방식의 전환과 쇄신
- 홍보, 커뮤니케이션 강화
- 회원서비스 강화와 회원 확보

일부 활동에 있어 활동방식의 변화를 시도한 사례가 적지 않으나 조직 전반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움. 특히 운동 이슈와 관련하여 현장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성명, 보도자료 발표 등의 활동방식을 유지하는 한편 의미있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음. 활동방식 혁신 시도의 사례로서 각종 심층 분석 자료로서 이슈리포트 다수 발간, 논평 혹은 성명이 아닌 방식의 다양한 콘텐츠 가공, 다음 아고라와 블로그 글쓰기 강화, 깔끔한 피켓 제작, 시민참여 방식의 퍼포먼스 기획과 국민감사 청구, 다양한 소재의 시민교육 등을 들 수 있음.

2007~2008년에 걸쳐 블로그 사이트로의 개편을 통해 떠나르기 쉬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통의 활성화를 꾀하였음. 촛불정국으로 참여연대 사이트 방문자 추이는 상향곡선을 그리기도 했으나 대체로 전년도 수준인 1일 1천명 내외 수준을 유지함. 회원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는 회원게시판 활기차 개편, 통인동 편지, 참여사회의 회원 콘텐츠 강화 시도가 있었음.

회원사업은 회원들에게 100% 맡길기, 10%만나기, 1% 활동회원 확보를 목표로 했음. 연간 8천여 건 전화 통화 시도, 10년지기 성실회원들에게 기념품 발송, 감사전화 두 차례 실시, 회원 한마당을 포함한 다양한 회원 행사와 조직 사업 진행하여 1천명 가까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그 결과 5년 만에 1만 명의 회원을 회복, 2008년 회원가입 수 1,439명, 총회원 수 10,068명(2008년 12월 31일 현재)에 이룸. 하지만 회원확대 캠페인은 연중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상반기 1회만 진행됨. 여러 악조건 속에서 후원의 밤 행사는 소액 다수 후원으로 목표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후원회 밤 이외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20대 청년층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인턴1기에 이어 인턴2기를 진행하고 3기 활동 중임. 부서 업무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음. 반면 주부와 장/노년층 조직화 전략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자원활동가 그룹 인원 보충이 원활하지 않았음. 태안기름제거 봉사, 허태욱님 추모답사, 회원확대 회원토론회 등을 시도하면서 회원모임 활성화를 꾀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함.

시민교육 부문에서 참여연대는 2008년 한 해 동안 174회 이상의 왕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복지학교, 평화학교, 연구소 기획강좌, 시민경제교실 외 회원한마당, 굿모닝 세미나, 주경아독, 인턴교육, 교사 직무연수 등 양적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내실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음. 2007년의 많은 실험을 토대로 2008년 참여연대 시민교육은 자기 색깔을 갖고 차별성 있는 시민교육 전략을 세우는 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음.

애뉴얼리포트를 제작하고 외부광고를 통한 이미지 홍보가 시도되었으나 참여연대의 통합적 메시지 제작은 구체적인 홍보 전략과 전달방법을 찾지 못해 진척이 없었음. 참여연대에 대한 음해와 오해 불식을 위한 활동은 대응전략과 수단을 찾지 못하고 일부 단편적인 대응에 그쳤음.

시민사회진영과의 소통과 협력

2008년 방향

- 사회운동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
- 진보의 비전과 정책수립 위한 논의 틀 모색

참여연대는 사회경제적 개혁조치들의 후퇴를 막고, 민생확충을 요구하며,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시민사회운동 현장에 함께 했음. 그리고 참여연대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의 소통과 연대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광우병 대책회의'를 조직하고 대책회의에 활동에 조직의 최대 역량을 투여하여 분노하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의 대열에 나섰음. 이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촛불 시민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공안탄압에 맞서 인권침해보고서 발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10만인 서명운동, 피해시민 구제 등의 공동 활동을 전개하였음. 촛불의 기록을 담은 단행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도 발간함. 이를 바탕으로 민생악화와 민주주의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대체로서 '민생민주국민회의'를 조직화하는 한편 체제력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

그 밖에 한반도 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 '운하백지화공동행동'과 의료 공공성 훼손 저지를 위한 연대기구 '건강연대'와의 연대활동, 경찰폭력과 공안탄압에 대한 공동대응이 있었음. 한편 이름뿐인 연대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유보됨.

2008 활동기구별 사업보고

사회경제분야

민생희망본부

연초 계획대로 민생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힘겨워 하는 부분인 교육(비)과 주거(비)문제에 대해 집중 활동 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또한 광우병, 멜라민 문제 등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새롭게 대응을 시작했음.

경제위기-민생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민생민주국민회의와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을 발표하고, 한겨레신문과 <민생뉴딜> 기획을 진행하는 등 <부자감세>와 <삼질경제>가 아니라 서민에게 특단의 예산을 지원하는 민생뉴딜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대중운동을 전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임. 실제 서민들의 희망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온 부분은 안팎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민생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방면의 민생현안에 적극 개입하고 열심히 활동을 했더라도, 서민문제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음. 얼마나 서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었는, 정말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희망을 주고 있고, 핵심을 짚어 잘 전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곰곰이 따지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서부터 2009년 활동을 해야 함.

등록금 문제 대응

보통의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등록금, 사교육비, 주거 문제에 대한 집중 대응을 전개했음.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고, 각종 캠페인을 통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을 조성했음. 등록금넷과 공동활동 병행함.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초 경향신문과 공동기획도 진행.

사교육비 폭증 대응

현 정부 들어서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교육비 폭증과 사교육창결 문제 해결 활동에도 주력했음.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에 적극 참여함. 영어몰입-국제중-일제고사 등 모니터링, 공정택 교육감 고발 진행. 학원들의 불법-폭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도 제출함.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복지

주거문제의 경우 토지주택공공성넷 결성하여 부동산-주거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틀을 마련하고, 특히 중부세 지키기 활동에 주력했음. 부동산-주거 문제에 대한 참여연대, 나아가 시민사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입과 입장을 발표하는 성과 있었음. 하지만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투기 규제 장치 전면 해제 등을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음. 또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서민 주거복지관련 다양한 현안이 있음에도 이를 참여연대 차원에서든, 토지주택공공성넷 차원에서든 효과적으로 제기하지 못했음.

식품안전 문제 등 새로운 대응 전개

식품안전, 주요공공서비스 민영화 문제 등도 대응했으나 깊이 있고 정교한 대응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다만, 식품안전 문제에 대해 새롭게 눈뜨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한 해였음. 향후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사가 더 커질 것이므로 실력있는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임

민생현안 모니터링

물가-공공요금-통신비 등 민생현안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시도했음.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문제도 모니터링 시작했음. 또한 도박, 다단계, 대부업 등 민생 침해 현안에 대한 대응도 지속했음.

노동사회위원회

노동허어로 FGI(표적집단면접) 사업, 공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CSR 기획강좌 등을 통해 노동사회위원회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안착되고 있음.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정부와 재계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성명, 토론회 등을 통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냄.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한 노동허어로 사업은 우리사회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청소년, 여성, 이주, 고령, 장애인 등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노동실태를 이야기하고,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표적집단 면접(FGI) 형식으로 진행했고,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결정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성과를 거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의 시각과 목소리로 그들의 현실을 진단하는 이 기획은 기존 노동운동과 차별화된 사업방식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음.

노동부문의 사회적 책임 지표(PSPD-CSRL) 개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평가 보고서 발행, 토론회와 기획강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안착시킴. KTX, 코스콤, 한국타이어, 기륭전자 등 개별사업장 문제는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데 그침.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대안(노사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기획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한 대응

경제5단체의 노동부문의 규제완화 요구안, 대한상공회의소의 비정규직법 완화 건의문 등에 대한 비판적 입장 발표

노동부문의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관련 논평과 성명 발표, 질의서 발송, 간담회 개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7대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노동부문의 실태보고서 발표

[기획강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묻는다(총4강) 개최

개별사업장 및 현안대응

KTX 여승무원 문제해결 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등

기륭전자 비정규직 사태 해결 촉구 입장 발표, 국회 면담, 기륭전자 사측에게 경영권 취득과정 의혹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등 진행

알리안츠 파업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랜드 불매운동, 사태해결 촉구 논평, 기자회견 등 진행

코스콤 농성장 강제해산 비판, 법원의 코스콤 위장도급 인정 판결에 대한 환영 논평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관련 근본적 대책 촉구 성명, 기자회견, 토론회 등 진행

미등록 이주노동자 검거할당제 및 표적단속 철회 촉구 성명, 기자회견 등 진행

이천 화재참사에 대한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권고에 대한 환영 논평 발표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우리사회 노동HERO가 말한다'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청소년, 여성, 이주, 고령, 장애인 등 우리사회 대표적인 5대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 집단 면접(FGI: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

사회복지위원회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기 바쁜 한 해였음. 촛불이라는 외 부적 환경도 큰 영향을 미쳤으나 복지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현안대응에 급급했음. 이에 따라 집중사업으로 계획했던 복지시장화 대안담론 마련과 공공 성 강화 사업은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의 료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한 입장 발표와 더불어 회원들과 함께 보는 식코(SICKO)보기 행사,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를 주제로 이슈리포트를 발행함. 상당수의 사업이 보건 의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참여연대의 입장정리를 꾸준히 시도함

희망복지학교 사업은 대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또한 온라인 강의서비 스를 통해 250여명이 희망복지학교 과정을 수료해 복지지지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평가할 만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사회권(ICESCR)심의와 관련, 인권시민단체와 유엔인권메커 니즘을 적극 활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함.

복지정책 일반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기초,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발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후보자,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사퇴촉구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인사의견서 제출

총선 정책자료집 <꼭 해야 할 8가지, 절대 해선 안 될 4가지 복지정책> 발표

국정감사, 예산, 법안 관련 국회대응 사업 진행

복지시장화 대항담론 마련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쟁 담론에 맞서는 대항담론을 개발해 진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함으로써 <한국적 복 지국가>를 위한 모델 구축하기 위한 내부워크숍 개최

한국 사회복지의 공급구조, 복지시장화, 사회서비스와 바우처제도, 국가복지 확대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등 의 주제로 총 8회에 걸쳐 진행

희망복지학교

대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복지국가의 이념과 좌표, 한국사회복지의 현실, 시민운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강의와 복지운동 단체 방문 프로그램으로 진행

보건의료

정부의 의료민영화(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저지 활동

회원과 시민대상 영화 식코(sicko)보기 행사를 2회에 걸쳐 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1.5배 보험료 인상, 보장성 90% 확대)제안

건강보험료 인상율과 수가 결정 관련하여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대응 활동

의료법, 의료채권법,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급여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개최, 입장발표

주요현안 모니터

연금제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 상설화를 위한 입장발표, 의원간담회 진행

공공부조 : 최저생계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면 개혁 촉구 입장 발표

보육정책 : 보육바우처 도입 반대 입장 발표,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의원간담회 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공적요양시설 확충,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 인하, 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등의 제 도개선 요구안 전달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연속워크숍 진행

유엔인권메커니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제네바 현지 로비활동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규약) 관련 반박보고서 작성, 사전실무분과 심의 참가하여 구 두발언, 사회권 위원 면담 추진

출판사업

매월 <복지동향> 발송

<전환기의 한국복지패러다임> 출간

시민경제위원회

친재벌·대기업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따라 ▲재벌의 은행소유 (금산분리 완화)를 포함한 친재벌·대기업 위주 정책에 대한 견제와 ▲하도급 업체 및 중소기업 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주 사업내용으로 계획하고 ‘시민경 제’ 분야의 새로운 사업영역 및 과제 발굴을 위한 기반 형성에 주력하기로 했음.

상반기 삼성 불법행위 규명 촉구활동과 삼성특검 수사에 대한 대응활동이 있었음.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삼성그룹의 사회 전방위 로비활동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 지속된 참여연대 활동은 삼성 전략기획실 전격 해체 및 이건희 회장의 경영일선 퇴진, 이재용 씨로의 경영 후계 구도 지연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고환율 정책, KIKO (Knock-In Knock-Out,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방지 옵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유발, 종부세 등 부자감세 정책 추진에 대응하여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 경질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음. 원자재가 상승분을 계약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을 마련, 의원발의로 연결시켰으며, 자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상향 조정을 담은 은행법 개정 시도에 대응하여 현행 유지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음.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비판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음. 이후 '시민경제'에 적합한 아이템(대기업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비자 관련 활동, 중소기업 고충 처리 법제화 등)과 사례발굴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임.

삼성 불법행위 관련 (1~7월 집중)

삼성 이건희 회장과 핵심측근들의 불법행위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금융기관들의 불법 및 직무유기성 행위에 대한 책임추구를 위해 독자적 입장발표 이외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을 구성해 시민사회단체와 공동대응에 집중함.

삼성 재판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한 <방청기> 연속 게재함.

삼성보고서 4탄 <삼성의 거짓말 보고서>를 발표했고, <특검 기소 이후, 삼성특검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토론회를 개최했음.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대응

재벌 및 금융정책 퇴보 저지 : 금산분리 완화 및 출총제 폐지, 상법 개악, 금감원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의원면담, 시민단체 공동대응을 진행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 경질 요구 :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중소기업으로의 손해 전가, KIKO 불완전 판매로 인한 중소기업의 눈덩이 환차손, 금융사 및 부실 건설사 지원 등과 관련 칼럼, 기고 활동, 토론회 개최, 국감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함.

조세개혁센터

9월 1일 정부와 여당의 감세법안(2008년 세계개편안) 발표 이후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집중적으로 대응함. 헌법재판소 세대별 합산 위헌결정 이후 여론 환경이 나빠졌으나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막기위한 다양한 활동들은 종부세 세율인하 폭을 다소나마 줄이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단, 애초 계획했던 조세 정책과 관련한 대응논리 축적하고 인력 풀 확충을 위한 <조세논단> 발행은 진행하지 못했음.

향후 부동산 세제와 관련하여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조세정책을 재정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 전개가 요구됨.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대응

이슈리포트 <종부세 무력화 방안, 지자체 종부세 교부금 전액 삭감될 것> 발표

종부세 현재 결정 비판과 의견서 발표

<상속세와 종부세, 부자감세 법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 6가지> 보고서 발표

의견서 <100억원 주택소유자 대신 민생을 신경써라 -종부세 감소와 지방재정 6문 6답>발표, 기자회견 및 의원면담 진행

'토지주택공공성넷'을 통해 종부세 무력화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집중적 대응과 정치권과의 공조를 이루어냄.

부자 감세 정책 대응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관련 토론회 개최, 국감 모니터링 진행

2008 정부 세계개편안 발표에 대한 입장 발표

세금정책 관련 칼럼 [시민경제교실] 게재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국민 대다수가 내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거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거의 정부와 한나라당 안대로 통과됨.

권력감시분야

행정감시센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개발주의와 부패인사 기용 등에 대한 반대운동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희망을 만드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음.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미리 예상한 부패인사 기용에 대응하여 인사청문회 검증요구와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운동을 펼쳐 일정한 성과를 이뤄냄. 새 정부의 개발주의로 대표되는 운하건설을 막는 운하백지화국민운동에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하고 쇠고기협상 관료감시보고서 등 관료감시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를 5차례 발표함.

상반기 인수위 대토론회, 부적절 인사에 대한 대응, 쇠고기관료감시보고서 등은 적절하게 배치되어 일정하게 성과를 만들어 냈으나, 하반기 쌀직급불사태 대응, 경찰모니터 사업 및 국회 대응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함.

인수위 활동 모니터 및 정부조직개편 대응(1-2월)

6대 분야 인수위원회 평가 대토론회 개최
정부조직개편 반대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및 인사파문 대응 사업(2-6월)

장관급 인사청문회 인사의견서 및 검증과제 발표(10인)
장관 후보자 3명 및 박미석 청와대 수석 등 문제 인사 교체 요구 운동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부동산조치법 위반 고발
인사청문회 평가 이슈페이퍼 발행

쇠고기협상관료감시보고서 발표 및 국민감사청구(5-7월)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의 책임자를 규명하는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1,000여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모니터 사업(7-10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준수 여부 등 모니터링하는 관료감시보고서 발표
취업제한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청원안 마련, 2009년 입법청원 예정

305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인사모니터(5-10월)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압력에 대한 항의 및 문제인사 임명 반대 활동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압력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종합 관료감시보고서발표

쌀직불금 사태 현안 대응 사업(10-11월)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논 보유 공직자 명단 공개
쌀직불금 사태 국정조사 요구 및 쌀직불금 사태 은폐 관련 감사원 개혁 요구

공안탄압 대응 및 국정원 강화 5대 악법 반대운동(10-12월)

어청수 경찰청장 사퇴요구 10만인 서명운동
촛불시위 과정 경찰폭력관료감시보고서 발표 및 국정감사에서 책임규명 요구
촛불수호비상국민행동 참여
통신비밀보호법 등 악법 반대 의견서 발표, 연말 5대 악법 반대 집중행동 전개

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활동을 개선하고, 변호사윤리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변호사 윤리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것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했음.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맞춘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견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부상하고 애초 활동방향대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했음.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검찰감시 강화 필요성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촛불집회를 비롯한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의 급격한 정치적 편향에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반면에 오랫동안 주창해온 사법개혁 과제중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고 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후속과제로 변호사시험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사법감시센터가 실제 제도운영과정을 밀착해서 모니터링하고 입법로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애초 설정한 '사법개혁 과제 이행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음. 또한 새로운 이슈(법원장 출신 고위법관의 퇴직 후 활동, 변호사 지역별 편중에 따른 법률서비스 소외지역)를 발굴하고 내실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사법감시 활동의 주제와 영역을 넓힌 것도 2008년의 성과였음.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 편향을 제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으나 하반기 이후 검찰감시의 방향을 잡아가 2009년 활동의 기초를 다지고 사법감시 전문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사법개혁과제 안착과 법률서비스 확대 등 활동주제를 넓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사법개혁 관련

국민참여재판 시행 모니터 및 시민공동방청 (국민참여재판 10회 방청 및 방청기 발표와 개선점 제안, 시민 참여 프로그램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6회 진행)
올바른 변호사시험제도 입법운동(정부안 비판 의견서, 국제심포지움 공동주최)
뇌물, 배임횡령, 성폭력범죄 재판의 올바른 양형기준 마련 촉구(토론회 공동주최)

법률서비스 개선 관련

법률서비스 공급 소외지역(무변촌) 실태 조사 및 일본변호사단체의 모범사례 소개 보고서 발표

법조윤리 개선 관련

퇴직 법원장들의 퇴직 직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 현황 조사 발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 개최
MB악법을 발의한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 조사 발표

검찰 감시/개혁 관련

재심 무죄 판결문을 통해서 본 검찰의 과거 잘못 조사발표,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조작사건 피해자 증언 및 반성 촉구 기자회견
촛불집회관련 검찰과 법무부(경찰)의 강경대응 비판, 촛불집회 참가 국민에 대한 수사 비판활동, 폭력혐의 경찰관 수사 방치 조사자료 발표, 일선검사와 일선 경찰관에게 보내는 시민항의엽서 캠페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 및 권력화 견제 좌담회,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근무 실태 조사발표

현재 개혁 관련

헌법재판소 구성원 다양화 촉구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및 연구관 등 현재 구성원의 현황 분석

공익법센터

2007년말부터 진행된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 법률 지원 등의 활동을 필두로 사법시험정원제 위헌소송, 조중동광고주불매운동 위헌소송 및 왜곡보도 정정보도 소송 등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수행함.

특히 촛불정국을 거치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등 민주주의 기본권 수호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급부상, 이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센터 활동력을 복원한 것은 성과로 남음.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 지원

법대생 및 연수원생 등으로 총 100여 명이 넘는 법률지원 봉사단 조직하여 법률상담과 안내 진행함.
삼성중공업의 무모한 항해 입증시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여론 확산에 주력함. 이후 언론 등 보도태도 및 피해주민의 인식 바꾸는 데 기여함

표현의 자유 대응

촛불 정국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 공익소송, 민사소송, 칼럼 등 다각적으로 대응함
네티즌 등 국민의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발의된 각종 악법-사이버모욕죄, 정보통신망법 등-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 사이버 통제국가의 실상을 보여주는 대중적 글쓰기, 칼럼, 기자회견, 토론회 등의 활동을 펼침

사법시험정원제 위헌소송

사법시험정원제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임을 확인하는 소송 진행함.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나 총정원제를 통해 국가가 사실상 여전히 변호사 수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함.

장애인차별

지난해에 이어 75개 공공기관에 시각장애인 웹사이트접근성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송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 차원의 공익소송 및 소송을 통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었으나 새로운 아이템을 찾지 못하고 사업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마무리함.

의정감시센터

18대 총선에서는 별도의 연대활동을 기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후보정보 공개활동을 진행했음. '열려라국회'를 통해 그동안 센터가 축적해온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총선후보 정보 공개사업을 진행했다는데 의미가 있음.

2008년 정기국회의 핵심방향을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정책 반대', '물가폭등시대 민생희망 만들기',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역할 강화'로 제시하는 한편, 입법·정책 과제 발표 활동, MB악법 저지운동을 벌였음. 정당정책, 개별의원 의정평가는 청와대 중심의 입법정책 추진,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구도 속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았음.

18대 총선 대응

전국 17개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비 절감, 주거비 안정, 의료비 공공성 확대, 대형마트 규제, 비정규 차별 해소 등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발표. 40개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정당 답변 내용 공개했음. 부패전력, 전과,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추태구태행태 후보 등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를 4회 발표했음. DAUM과 공동으로 <18대 총선, 토론 배틀> 페이지 개설. 6개 정당 정책 담당자가 '경제 살리기, 등록금 해법, 고용 확대, 의료비 절감 대책' 등에 대해 토론했고, 네티즌은 댓글 토론으로 참여했음.

18대 국회 개원 및 정기국회 대응

경제, 교육, 환경, 여성, 복지 분야 등의 11개 시민단체와 6개 싱크탱크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 개최
18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 복지, 노동, 경제금융, 정치, 행정, 사법, 통일외교국방 분야 99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각 팀이 상임위별 국정감사 모니터링 후기 작성하고 '오늘의 의원', '말말말' 선정하였음.
DAUM과 공동으로 '국정감사, 저도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개설하여 네티즌이 직접 정책질의를 하고, 의원과 토론하는 공간을 마련했음.
정부·여당 법안 분석하여 'MB악법 22선'을 선정하고, 악법 발의에 앞장 선 여당 의원을 골라 'MB악법 최다 발의의원' 발표했음. 온라인 통해 네티즌 5분 항의행동 제안했고, 회원들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 진행했음. MB악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에 참여했음.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는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운동

31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입법청원을 하였고, 네티즌과 함께 국회의원 면담, 공동 기자회견,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 편지 발송 등을 진행했음.
총선 이후까지 자문변호사단과 함께 선거법 피해 네티즌 상담 업무진행

국회감사사이트 열려라국회 개편

3차 개편 진행하여 디자인 개편과 시민참여형 메뉴 보강했음.
의원 당내활동, 후원금과 백지신탁, 선거정보, 정당자료 DB 구축 중임.

평화군축센터

평화국제분야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국방정책의 전반적인 후퇴 속에 특히 남북관계 악화가 두드러진 한 해였음. 관련하여 신정부의 통일외교국방정책에 관한 기본입장과 제언 발표, 연속 쟁점토론회 개최, 쟁점 법안과 정책에 관한 의견서 발표, 모니터 보고서 작성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했음.

특히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됨에 따라 상황악화에 대한 기본입장과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논평이 이어졌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본입장 표명에 그쳤을 뿐 정부 정책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반면 한국군 해외 파병 정책, 방위비 분담금, 북한인권법안 등 축적된 모니터링 활동과 충실한 자료 생산을 통해 유의미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으로 이어졌음.

체계적인 국방예산 및 무기 모니터링을 시도해보고자 했으나 국방연구 연속 세미나 개최 이외 구체적 진척을 이루지 못함.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정책과제 발표,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국회 국감 국방위 모니터링, 2009 국방예산의 문제점 발표 등 초보적인 대응은 유지했으나 퇴행적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대응하지 못했음.

한편 활동방식의 변화를 꾸준히 시도하였음. 대중적인 반전 평화행동, 대중강좌 등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기획된 프로그램 이외 사안별 연대활동을 통해 소모적인 연대 활동을 많이 줄였음. 성명, 보도자료 발표를 최소화하는 대신 각 활동의 내용을 후기나 모니터 보고서, 현안 해석 자료, 이슈리포트, 칼럼 등으로 가공하고 대중적 글쓰기를 꾸준히 시도하는 등 콘텐츠 생산과 유포에 집중하였음.

신정부 외교안보정책 모니터링과 대안정책 방향 제시

인수위 활동평가 토론회 개최와 신정부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입장과 제언 발표
이명박 정부 대외정책에 관한 쟁점토론회 연속 개최(PKO/ODA 등 기여외교의 방향,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 대북정책, 북한 인권법안 등)
2008 정기국회 통일외교국방분야 입법정책과제 발표
[이슈리포트 : 방위비 분담금 실태와 '퍼주기' 논란의 진실] 발표 및 국민감사청구 진행
[의견서: 인권개선 실효성 없고 남북간 반목 초래할 북한인권 법안] 발표
[의견서: 국군부대의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발
[의견서: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위협 재평가와 국방예산 축소 필요] 발표
[이슈리포트: 유엔 PKO 파견 확대 및 상비부대 설치 주장에 대한 비판] 발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정세 및 파병정책에 관한 모니터 보고서 업데이트 지속

국방정책 감시 활동

국방정책 연구 세미나 (국방개혁2020, 방위사업청, 주변국 군사력 등) 연속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 모니터링 및 모니터 보고서 배포
2009 국방예산의 문제점, 국방개혁2020 평가와 과제 발표

다양한 대중적 평화행동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진행

이라크 침공 5년 즈음한 평화행진 <총 대신 꽃을> 진행
한일 쟁점 이해교육을 위한 <알통강좌>(총 6강) 공동 진행
평화학교 <국제분쟁 이해와 한국의 역할> (총 10강) 진행
특강 <김영미 PD가 전하는 분쟁의 속살> (총 2강) 진행
미 오바마 대통령 당선 관련 찰스 암스트롱 교수 강연 진행
한반도와 국제평화 이슈 망라한 <2008 평화백서> 발간

국내·국제 평화연대활동 지속

국제심포지움 <다시보는 헌법과 평화국가 만들기> 공동 개최
국제세미나 <독일과 한국의 미군기지 재편 현황과 쟁점> 공동개최
2008 한국 평화활동가 대회, 한반도인권회의 관련 집중연대활동
미-인도 핵협정 국제공동행동, 일본 헌법 9조 세계대회 참가, 2008 베이징 민간아셈포럼 참가

국제연대위원회

정책감시활동과 출판 교육 등 아시아 관련 대중활동을 강화하고자 했던 활동목표에 따라 즉자적인 대응없이 사업을 추진했음.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연간기획 아시아포럼과 출판 등 아시아 이해를 높이는 활동들을 차질없이 진행했음. 특히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조명한 연간기획 아시아포럼은 참신한 주제선정과 대학과의 공동사업으로 재정자립, 파트너로 활동한 대학과의 협력사업의 발판을 닦은 점이 성과로 남음.

ODA정책감시 체계를 정비하는데 주력하면서 국감시기에 맞춰 ODA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ODA정책감시 분야에서의 참여연대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ODA공론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아시아 담론 확산과 아시아 이해와 소통

연간기획 아시아포럼(총 11회)은 마약, 인신매매, 환경 등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를 주제로 총 9강의 주제별 포럼과 2회의 좌담 및 종합토론회 진행함.
칼럼 <아시아 생각>은 총 18회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와 프레시안에 게재함.

아시아 연대 활동

버마 사이클론 피해 모금활동, 버마 사이트 운영, 버마 번역서 출판 기념좌담회 등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활동 진행
인도 오릿사 지역의 포스코 건설공사에 따른 거주민 인권침해 관련 공동기자회견 개최
3월 중국의 티베트 폭력진압 관련 티베트평화연대와 함께 공동기자회견 및 릴레이 평화방송 대회에 참여. 중국의 민족주의와 인권 문제 관련 내부좌담회 진행.

출판 기획

아시아생각 칼럼집 『우리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해피스토리, 6.12)과 버마번역서 『양지를 찾는 사람들』(아시아출판사, 11.28) 출판

국제연대 청년교육 프로그램

참여연대 인턴교육에서 6회의 ODA강연 진행
아시아 관련 경희대 캠퍼스 영상제 <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진행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정책감시 활동

한국 정부의 원조목적과 집행체계를 분석하는 ODA정책보고서 발간. 한국대외원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으로 ODA기분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제시
한국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정책의견 제시,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국제원조감시단체와 공동의견 제시, 국제원조감시단체인 RoA(Reality of Aid)와 함께 ODA 보고서 제작에 참여
독일 등 선진공여국의 사례와 수원국 인도네시아 정부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인도네시아 ODA연구기행(8/10-15) 진행

시민참여분야

시민위원회

참여연대 2008년 5대 사업방향 중 <시민의 언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는 시민운동,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 걸으며' 참여연대 희망 만들기>를 위해, 시민참여팀은 회원조직과 회원서비스 강화에, 교육홍보팀은 시민교육 사업 확대와 인터넷/참여사회/피플티비 등 매체의 통합운영을 통한 소통강화에 주력함.

회원사업 목표로 삼은 100% 말걸기, 10% 대면, 1% 활동에 외형상 근접하는 성과를 보임. 연중 회원확대 캠페인 추진을 위해 '멋쟁이사업단'을 결성하는 등 회원 임원 상근자의 활약으로 수년 만에 1만 회원 회복.

시민교육 재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 시민교육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함. 이후 시민교육 기관 설립을 통해, 본격적인 교육사업 추진 단계로 성장함.

<인턴프로그램> 등의 청년사업과 2009년 2월 출간 예정인 <청소년을 위한 NGO 가이드북> 등 미래세대와의 접촉면을 점차 넓혀가고 있음

회원서비스와 소통 강화

100% 말걸기를 목표로 회원서비스 진행함. 8천여 건 시도로 6천여 회원과 통화하면서, 소통의 활성화를 만들어가고 있음. 미납 회원에 대한 메일안내 서비스 강화하고 신입회원에게 당월행사안내 홍보지를 첨부하는 등 일상 서비스 확대함. 10년 회원 등 오랜 회원에 대한 감사 계속 진행.

10% 회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연인원 1천명 가까이 함께함. 연간 큰 행사를 중심에 놓고, 다달이 회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 동시에 총회 감사전화 회원토론회에서 파악한 회원의 요구를 수렴함.

1% 활동회원 성장을 위해, 회원모임과 자원활동 활성화에 집중함. 태안기름제거봉사 허태욱님추모답사 회원확대 회원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됨. 9월에는 회원모임 <참여현상소>가 촛불사진전을 열기도 함.

시민교육

시민교육 2년차, 파일럿 프로그램이 대체로 성공을 거두며, 시민교육 사업의 가능성과 본격화에 대한 내외부적 공감대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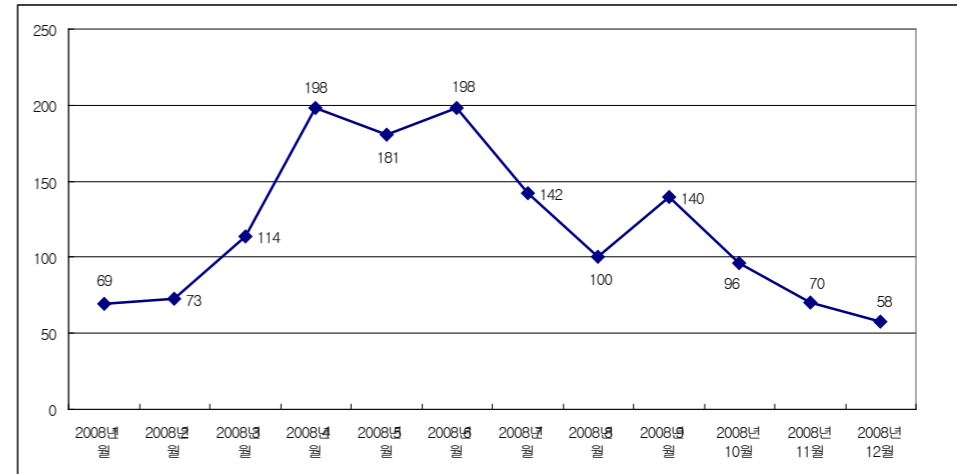
주경야독, 굿모닝세미나, 연구소 기획강좌 등의 안정화에 이어 현 정부의 경제담론에 맞서 경제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민경제교실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으며 인기강좌로 성과를 남김. 사회이슈 뿐 아니라 자기성찰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꿈분석 등이 인기를 누림.

3기에 접어드는 <인턴프로그램> 등을 통해, 20대 청년의 열성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안내데스크 등 자원활동도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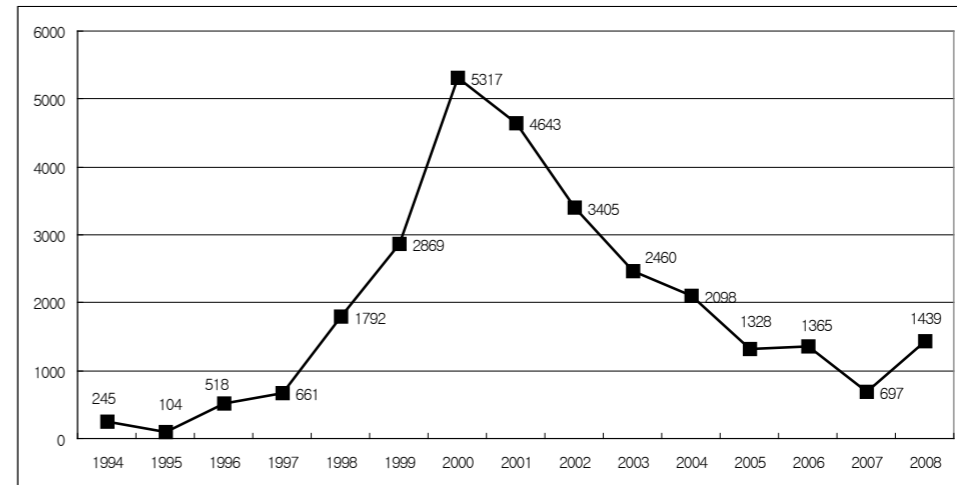
미래세대와의 만남을 적극 도모함 : 청소년들에게 NGO의 가치와 영역에 대해 이야기형식으로 모아낸 <열정세대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십대들 이야기> 출판으로 청소년들과의 시민운동 네트워크 모색

참여연대 회원가입 현황 (2008년 12월 31일 현재 회원 수 : 10,068명)

[표1] 2008년 월별 회원가입 수



[표2] 연도별 회원가입 수



연간 170여 회 강좌/행사로 연 1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표〉 2008년 주요 시민교육 프로그램

시리즈명	강좌명	기간	주요 내용	주무부서
기획 강좌	1탄	5/14-6/11	1강 뉴라이트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사회 연구소
	대한민국 60년, 다 시 대한민국을 묻 는다	총6강	2강 해방전후사 무엇으로 배울 것인가 3강 식민지경제는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는가 4강 '한강의 기적' 은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5강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인가 6강 새로운 60년, 대한민국의 좌표를 묻는다	
	2탄	11/6-11/27	1강 헌법이 정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헌법 강장에 서다	총4강	2강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 3강 우리 사회를 깨운 국내 판결들 4강 민주주의와 인권을 바로 세운 해외의 판결들	
기획 세미나	칼 폴라니의 <거대 한 변형> 함께 읽기	7/9-7/23 총3회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함께 고전 읽어보기	
직무연수	시민교육의 이해	8/11-8/13	시민교육의 방법적 원리부터 시작하여 유럽의 시민교육, 정치교육, 미디어, 학교 및 지역교육 등의 이슈 등의 강연 및 종합토론	
굿모닝 세미나	환경과 운하	1,2,3월	시민사회와 환경과 연결시키는 학습세미나와 현실 이슈인 운하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발표하는 토론회 수업을 오전에 진행	교육 홍보팀
	성찰과 치유를 위한 꿈작업	4/11-6/21 10/7-12/9 (주경야독) 총10회	1강 꿈작업 왜할까? 꿈을 기억하는 요령과 기법 2강 꿈을 이해하는 열쇠 : 연상, 확충, 애니메이션 3강 꿈작업을 하는 6가지 힌트와 꿈의 구조 4강 꿈에서의 죽음과 섹스의 상징적인 의미 5강 어둠과 위협적인 남자와 파괴적이고 유혹적인 여자 6강 가장 흔한 꿈의 원형적인 의미 7강 상처받은 동물의 꿈 8강 하루밤에 꾸는 여러 꿈으로 작업하는 비결 9강 장기적인 꿈관찰과 꿈의 진화 10강 꿈을 이용한 문제해결	
	착한 먹을거리 혁명 (한살림과 함께하는 네트워킹 강좌)	11/25-12/6 총3회	1강 밥상머리에서 행복찾기 2강 착한 소비로 식생활 구조 바꾸기 3강 슬리농장으로 직접 떠나는 먹을거리 여행	
주경야독	새로운 페다고지	4/10-4/25 총3회	1강 기업사회론 2강 유교와 한국의 시민의식 3강 한국의 민족주의	
회원 한마당	재미난 강좌/여행 과 함께 하는 회원 한마당	5,6,10월	5월 정재승의 사랑에 빠지다 6월 금태섭의 디케의 눈은 왜 가렸을까 10월 박상표와 함께 떠나는 가을정선	시민 참여팀
시민 경제교실	1탄	05월 26일	강북집값 계속 오를까요	
	2탄	06월 23일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	
	3탄	09월 18일	검은 9월의 충격과 한국경제	
	4탄	11월 22일	1강 위기의 근원은 어디인가 2강 지표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 3강 아슬아슬 가정경제 불씨찾기	
인턴십 프로그램	1기	1/2-2/29	참여연대 오리엔테이션/민주주의, 정치개혁운동, 사법권력, 재벌개혁, 지구시민사회 등의 강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희망제작소, 518민주화운동, 국제민주연대, 경계를 넘어 등 방문 및 조별 토론수업	
	2기	7/1-8/8	참여연대 활동과 전망, 90년대 미국 청년 유권자활동, 21세기 민주주의, 68혁명, 정보공개청구운동 등 강연, 국민참여재판 방청, 문화연대 방문 및 교육감선거 독려 캠페인	

시리즈명	강좌명	기간	주요내용	주무부서
희망 복지학교		6/23-28	복지국가의 이념과 좌표 한국복지의 현실 : 불평등 한국복지의 현실 : 신사회위험 복지운동 M.T.	사회복지 위원회
	CSR강좌		1강 변화하는 기업경영 패러다임 2강 CSR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3강 CSR과 노동조합 4강 CSR가능성과 법제화의 한계	노동사회 위원회
알통강좌		5/29-7/13	1강 한일역사갈등, 공동의 역사를 위하여 2강 또 하나의 분단, 잊혀진 존재 '자이니치' 3강 피폭의 역사, 기억하고 이해하고 극복하기 4강 평화헌법, 일본의 굴레인가 동아시아 자산인가 5강 야누스의 얼굴, 동아시아의 민족주의 6강 동아시아 평화와 한반도의 좌표-평화국가만들기	평화군축 센터
평화학교	지구 평화를 지켜 라- 국제분쟁 이해 와 한국의 역할	7/2-7/15	1강 입학식 2강 (강)국제분쟁 이해, 근원과 양상 3강 (강)국제분쟁, 국제사회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4강 (사례발표)인도적 지원과 국제NGO 5강 (사례발표) 분쟁에 대한 국제 NGO 6강 (사례발표) 유엔과 평화유지군 활동 7강 (영화보고 토론하기) 노 맨스 랜드 8강 (강의) 한국은 국제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왔나 9강 (직접토론) 지구평화와 한국의 역할 -PKO 신속파견법과 시민대안 10강 졸업식	
평화 특강	1탄	10/22-23	1강 '홍선이 작아져라, 작아져라' 미군들의 이라크	
	김영미 PD가 전하 는 분쟁의 속살	총2회	2강 국제분쟁 제대로 이해하기	
	2탄	11월 06일	미국 대선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암스트롱 강연	
아시아 포럼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	3/28-11/21	1강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2강 마양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 3강 동남아의 인신매매 4강 아시아의 빈곤문제 5강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6강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7강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8강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9강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국제연대 위원회
아시아 영상회	내 이야기 들어 볼래?	9/23-9/25	1회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 어둠 속의 등불 2회 사우스 레일 : 가난에 대한 연대 3강 차이나 블루	

2008 연대사업 보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첫 촛불시위(5월 2일) 이후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 6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함.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저항은 정치권력과 시민과의 소통의 문제,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직접행동, 다양한 사회참여의 수단과 퍼포먼스 등 다중지성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던 기념비적인 대중운동이었음. 촛불운동은 이후 수많은 촛불관련 카페와 커뮤니티, 부문별-지역별 촛불모임으로 계승되고 있음. 동시에 촛불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네티즌과의 일상적 소통문제, 운동방식의 혁신, 대중운동의 목표와 방법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등 많은 교훈과 성찰의 과제를 남겼음.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대열에 함께 했음. 특히 광우병대책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회원, 활동가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음. 현재 참여연대는 각종 소송,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의 구속수감, 일부 상근자들의 불구속 기소 재판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책임있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몫을 다하고 있음. 또한 광우병과 관련한 식품 안전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촛불운동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악화되고 있는 민생, 민주주의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운동 연대기구로 출범함. 현재 준비위원회 상태이며 400여 단체와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참여하고 있음. 민주당과는 사안별 협력 기조를 유지하되, 민주당이 민생, 민주주의 현안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8년 연말 국회 입법 논란 가운데 '차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와 '엠비약법 저지 시국대회', 2차례의 민주당 항의 방문과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강만수 나가고- 종부세 살리고' 캠페인, 엠비약법 저지 긴급국민행동 등을 개최함으로써 민생민주국민회의(준) 활동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인했음.

참여연대는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참여연대는 2008년 핵심 연대사업으로 한반도 대운하 저지활동에 두고 환경단체들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을 조직하였음.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운하백지화를 요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 거리서명 등을 진행하였음. '물의 날' 행사를 참여연대 회원 집중행사로 진행하였고 4월 총선을 겨냥하여 국회의원 후보를 대상으로 운하특별법저지 서약받기 운동을 진행했음. 그 밖에 국토해양부 운하지원팀과 운하사업지원단 등 추진 단위의 명단과 관련문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통해 운하추진세력을 모니터링하고, 운하연구 관련하여 양심선언한 김이태 박사에 대한 지원활동이 있었음.

이와 같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설득력 있는 반박논리는 대운하 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을 70%이상으로 끌어올렸음. 이후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전문가, 학계, 종교계의 운하반대 움직임이 시너지를 내면서 6월 대통령의 유보 발언을 이끌어냈음. 그러나 정부가 또 다시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운하전초 사업에 나서면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재가동되고 있음.

국내 연대 기구 가입현황 (2008. 12. 현재)

참여연대 공동체

대구참여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상설 연대기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위원회 남측위원회,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에서 명칭 변경)

한시적 대책기구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공동행동,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3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시민센터설립추진위원회, 전두환(일해)공원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준),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모금

부서별 연대

토지주택 공공성 네트워크('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후신, 민생희망본부),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대책위원회'의 후신, 민생희망본부),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민생희망본부), 운하백지화국민행동('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의 후신, 행정감시센터), 수도권 과밀 집중 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행정감시센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사법감시센

터),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 2007(의정감시센터), 최저임금연대(사회복지위원회), 의료급여개혁 공동행동(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사회복지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사회복지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평화군축센터)

2008년 가입 기구

- 삼성중공업-현대오일뱅크화주 유조선기름유출사고법률대책회의
- 삼성중공업유류오염사고 공익실현을 위한 공동소송대리인단
- 4.15 공교육 포기 정책 반대 연석회의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범국민행동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한시 연대기구 결성 후 해소 (장기간 활동 중지 기구 포함)

- 버마 민주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석방대책위원회
-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 삼성 이견회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운동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 평택미군기지확정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 한탄강 살리기 시민연대
- 삼성중공업-현대오일뱅크화주 유조선기름유출사고법률대책회의
-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설 연대 기구 탈퇴 (아래 기구들은 자체 사무국 운영 체계로 독자적 활동을 함)

-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국제 연대 기구 가입 현황 (2008. 12. 현재)

ANFREL(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

1997년 발족. 사무국은 태국에 있음. 참여연대는 2000년 낙선운동 이후 가입
 대체로 아시아 나라들이 선거 기간 중 많은 유혈 사태와 불법 행위도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감시단의 활동 필요
 참여연대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의 선거 감시 활동에 참여한 바 있음

FORUM-ASIA(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1994년 발족. 사무국은 태국에 있음. 참여연대는 1997년 1월 초 가입
 대표적인 아시아 인권 단체(15개 국가, 40개 단체)로 버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 국의 인권 문제를 다룸. 매년 10월 3주간 인권교육 진행하며, 참여연대도 참여한 적이 있음
 지난 7월과 11월에는 촛불로 구속된 한국의 인권옹호자에 대해 한국정부에 항의하고, 석방촉구 및 진상조사단을 파견 인권침해사태 조사활동을 벌이기도 함

APA(Asian Peace Alliance)

2002년 발족. 현재 아레나(ARENA)가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음.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지역협력을 논의하고자 설립했으며 참여연대 2003년 운영위원으로 참여

2004년 참여연대는 UN ECOSOC(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취득, 유엔 회의에 참가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언할 수 있음

유엔 협의지위를 활용하여, 2005년 참여연대는 제네바에서 열린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가, 북한 인권문제,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하여 의견 제출. 2007년에는 시민단체 공동으로 북 인권 관련 의견서 제출

2008년 9월에는 참여연대와 한국NGO들이 9차 유엔이사회에 참여, 한국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침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구두발언과 로비활동을 벌임

2008 부설기관 보고

참여사회연구소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사와 대한민국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예상하고 관련 사업들을 기획하였음. '건국 60년' 논쟁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발행 등 역사 논쟁의 국면에서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3쇄 발행, 상반기 대한민국사 기획강좌, 민주공화국 토론회 등을 통해 뉴라이트 역사왜곡에 대항하는 담론지형의 형성에 기여하였음.

시민정치론 강의, 『시민적 공화주의』 등 단행본 출간 작업을 진행했고, 시민참여로 만들어낸 촛불광장의 기억을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어나가자는 취지에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를 출판하였음.

기획 강좌와 교사 직무연수 등 연구소의 교육사업이 성과를 거둔 한 해였음. 특히 교육청지정 직무연수라는 제도적으로 지속가능한 교사 대상 교육기반을 마련하였음.

연구모임 및 연구 프로젝트

경제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의 비정기적인 대안경제 연구모임 진행함. 연구기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했으나 학제간 연구의 어려움으로 일상적 연구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토론회 및 월례 발표회

주요 사회현안 관련 2월 송례문 토론회, 8월 정부수립 60년 토론회 등 5차례의 토론회(공동주체 포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발표회나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월례포럼은 내용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 기획 하에 정기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음.

교육 사업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직무연수 지정기관 승인을 받고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시민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직무연수를 진행함.

상반기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하반기 '시민의 눈으로 헌법 다시 읽기'등 두 차례 기획 강좌를 진행함.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로 촉발된 역사논쟁 국면과 촛불집회 이후 높아진 헌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강좌 내용은 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소통하였음.

출판 사업

『시민정치론 강의』, 『시민적 공화주의』 출판을 준비하여 2009년 출판을 앞두고 있음.

12월 촛불 관련 단행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출판함.

『시민과 세계』는 14호부터 출판사를 도서출판 사회평론으로 변경, 안정적인 발행기반은 유지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구독자 확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음.

2008 감사보고

사업감사 보고

2008년 활동방향에 비추어 본 참여연대 사업평가

김영희 감사 (변호사)

사회경제 분야

민생희망본부의 경우 등록금 문제는 등록금 네트워크 등 연대활동을 성공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생들의 동조를 얻어 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구택공공성네트워크,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연대활동을 통해 공론화하는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했으나,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비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 내는데에는 역량이 한계를 보였다고 봅니다. 식품안전문제 등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경우에도 좀더 준비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사회위원회의 경우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2008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삼았으나 가장 민감한 현안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허어로 FG' 등이 시도되기는 하였으나 정책 마련이나 사업 등 현실적인 노력이나 성과 면에서 매우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잘하기는 하였으나, 제한된 역량의 배분에 있어서 일자리 늘리기 등 노동시장 개혁운동에 더 힘써주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의 경우 이명박정권의 복지정책 후퇴에 대한 개별적 현안대응은 잘 되었고, 시민경제위원회의 경우 삼성불법행위 관련하여 '삼성 이견회 불법규명 국민운동'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한 것은 좋았으나 연대활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하였고, 특검 이후 재판과정에서 보다 힘있는 활동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당초 위원회 중점 사업인 중소기업문제 및 공정거래법 관련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조세개혁센터의 경우 중부세 무력화나 감세정책에 대하여 각종 보고서 등 많은 성과가 있었고 향후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권력감시분야

행정감시센터의 경우 반부패운동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은 다소 부족했고, 현실적으로는 제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공익제보지원단 등의 활동이 필요하고 관련 입법 등의 시스템 대안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기국회 정책과제나 국감과제 발표 활동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사법감시센터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시행 모니터링, 법조윤리와 검찰에 대한 보고서 발행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검찰의 수사,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 사법개혁에 대한 영향력 있는 평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공익법센터의 경우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 표현의 자유 대응 등에서 참여연대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잘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의정감시센터의 경우 '열려라 국회'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잘 하였는데 이 또한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업을 하였다고 봅니다. 민생, 민주주의 기본권 관련 의원, 정당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화국제분야

평화군축센터의 경우 한국군 파병 정책, 방위비 분담금, 국방개혁,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서 제출 등 성실한 활동을 하였으나 국방정책 등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응은 부족했고, 국제연대위원회의 경우 모자란 인력 등 제한된 조건 속에서 소모적 연대를 줄이고 필요한 사안별로 대응을 잘 했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분야

시민위원회의 경우 새로 생긴 부서로서 1만 회원을 회복하는 등 회원 임원 상근자의 노력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복지학교, 평화학교, 연구소 기획강좌, 시민경제교실, 회원 한마당 등 특히 교육사업을 매우 잘 했다고 보나, 주부와 장,노년층 조직화 전략이 여전히 부족하며, 자원활동가 그룹 인원 보충이나 회원모임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전반적으로 모든 위원회에 있어 전문가 결합이 담보된 상태라고 보는데, 활동가 역량 확보에 있어 각 위원회 위원들에 있어 새로운 전문인력들 충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회계감사 보고

회계감사보고 : 윤형근 (회계사)

회계기간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재정 및 회계 감사 보고 총평

2008년 회계연도 참여연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결과, 회비수입 및 부정기후원금 수입, 사업수입은 2007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정기 후원금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정기 후원금 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기 때문에 총수입은 2007년 대비 2.3%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지출 면에서 보았을 때 급여와 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해 순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8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었을 때, 대과없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향후의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수지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식부기에 의한 월별 회계는 외주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자료의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생산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회계처리 방침을 간소화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문별 평가

수입 부문

회비수입은 약 9억 8천여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정기 후원금 수입은 전년 대비 4.7% 줄었고 사업 수입은 3.1% 감소하였다. 후원금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2007년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특별 후원금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다.

지출 부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지출은 전년도에 비해 1억 원이 추가 지출(7.1% 증가)되었다. 급여 총액이 1억 원 가량 늘었고 사업비 지출이 7천7백만 원 추가 지출되었다. 그 대신 사무실 마련으로 인해 2007년 7천2백만 원 정도였던 임차료가 크게 감소하였다.

회계처리

2008 회계연도 회계처리는 외주방식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참여연대 사무처 중앙의 재정에 대한 과부하를 각 활동기구별로 균형있게 분산시키고자 확립한 독립채산제가 회계 자료의 생산과 관리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 독립채산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회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안건 ①

2009 사업계획안
2009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2009 종합 활동계획

1. 생존위기에 몰린 대다수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생대안 만들기
2.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각종 악법 저지 통한 민주주의 수호운동 전개
3. 공권력 남용과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4. 대북정책 전환과 평화인권외교 촉구활동 전개
5.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회원들과의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
6. 체계적이고 업그레이드된 시민교육 활동 본격화
7.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활동방향 1. 생존위기에 몰린 대다수 서민에게 희망이 되는 민생대안 만들기

- 현실적인 실업-일자리 대책 마련과 정책 실현 촉구 활동
- 서민부담 완화위한 등록금, 가계부채 등에 관한 입법활동
- 민생예산 확보 등 '민생뉴딜' 을 위한 대중 캠페인 전개
- 주거 약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입법활동 전개
- 복지현장 실태를 조명하고 견실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 재벌과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활동방향 2.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각종 악법 저지와 법제도 개선운동

-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제약하는 법안 적극 저지
- 통신비밀보호법 등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개정 시도 저지
-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촉구 활동
- 국민 기본권 관련 국회의원 발의법안과 상임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활동방향 3. 검찰, 법원, 경찰의 정치적 편향과 권한남용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백서 발행, 검찰 사건처리 관련 자료실 구축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연구
- 판결 비평 활동과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사업 복원
- 용산 철거민 참사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한 경찰의 책임과 처벌 촉구

활동방향 4. 대북정책 전환과 평화인권외교 촉구활동 전개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북정책 전환 촉구 활동 전개
- 국방개혁 후퇴와 불요불급한 무기도입 정책 감시활동 본격화
- 국제사회의 군축, 무기거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 조사 및 발표
- 아프간, 소말리아, 레바논, PKO 부대신설 등 한국군 해외 파병정책 감시활동 지속
- ODA 기본법 제정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방향 제시

활동방향 5. 회원 서비스 강화 및 회원들과의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

- 수도권 회원 대상으로 분기별로 '찾아가는 회원행사' 진행
- 회원들의 의견 청취나 설문이 가능하도록 일상적 소통체계 마련
- 감사인사 등 회원의 재정참여에 대한 감사인사 확대
- 참여연대 활동과 운영에 관한 회원 참여를 강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모색

활동방향 6. 체계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시민교육 활동 본격화

- 시민교육센터(가칭)를 발족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교육 활동 진행
- 시의성 있는 기획뿐만 아니라 진보, 인문, 상상력을 결합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 교사직무연수, 시민경제교실, 복지-평화학교 등 시민과의 접촉면 다각화
- 청소년,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차별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 시민사회 대표적 시민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

활동방향 7.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

-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견제 및 전환 촉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 강화
- 서민생존권-노동기본권-표현의 자유 등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활동 전개
- 세계력간의 민생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대안적 경제해법과 정책수단 발굴 모색
- 민생안정과 민주주의 수호를 기반으로 한 대중적 정치개혁운동 모색

2009 활동기구별 사업계획

사회경제분야

절망하는 서민들에게 희망 UP!

민생희망본부

경제위기와 민생고를 극복하기 위해 실업-일자리 대책과 서민금융문제 해법마련에 집중
뉴타운-재개발 관련 대안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기획 활동
등록금, 사교육비, 주거복지, 통신비, 식품안전 문제 등 민생현안 모니터링 지속
현실성있는 정책생산을 위한 '민생정책네트워크' 운영 및 각종 입법활동 전개
2009년 추경예산 공론화 및 2010년 예산안 선제적 준비

실업-일자리 분야 활동

실업사태와 고용대란 대응에 집중
실업-일자리 관련 대안 리포트 발표 등 정책생산 및 공론화 활동 전개

민생뉴딜 현실화 운동

녹색뉴딜 사업의 문제점과 민생 뉴딜 해법 공론화에 주력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10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2009년 추경 민생 예산 확보, 2010년 선제적 민생예산안 마련 공론화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정책네트워크 역할 실무 지속

토지-주택 공공성과 주거복지 확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 포기에 대한 모니터링
임대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임차인 권리 찾기 운동 전개
긴급주거지원제도 개선, 응급주택 공급, 다가구-다세대주택 다량 매입 등 주거 약자 지원 정책제안 활동

서민금융 분야 활동

가계부채 660조 돌파, 금융소외자 720만 시대 맞아 서민부담 완화 정책 강구

주택담보대출-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방안 제시
서민전담금융기관설립법을 제정안 제출, 공정채권추심법과 파산법 개정 촉구
대부업-이자제한법 상의 이자 인하 촉구 및 대부업-사채 감시활동 지속

서민가계 살리기

등록금 동결을 넘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대중운동 전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입법활동 전개
사교육 확산과 사교육비 폭증 유도하는 정책 철회 촉구활동
국제중, 일제고사, 특목고-자사고 문제 모니터링 지속

식품안전

광우병대책회의 후속 활동 협력-지원
식품위생법, 식품안전법 개정(집단소송제 도입 등) 통한 식품안전 제고 활동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을 감시하고 실업대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

실업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대안담론 형성
이명박 정부의 노동분야 규제완화 정책 감시활동 강화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경제위기시 노동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론화

실업대책 대응

대안적 실업대책 마련을 위한 민생/노동/복지 TF 운영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취약계층 실업대책 등에 관한 시리즈 정책토론회 개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비정규직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 대응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위한 온-오프라인 집중 캠페인 전개
정부입법안과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안 비교분석 등 정부정책 성향 분석
경제침체에 대응하는 각종 기업사례와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성향 분석
정당 면담, 간담회 개최 등 대국회 활동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실태 고발사업 - 노동히어로 시즌2

청년실업자,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표적집단면접

(FGI) 통해 노동실태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공론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참여연대 노동지표(PSPD-CSRL)를 기준으로 기업평가 실시(매출액 기준 30대 민간기업과 24개 공기업 평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법제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네트워크 운영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활동 진행

복지운동의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건설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한국복지체제 대안 담론 마련

희망복지리포트 발간을 통한 복지운동의 현장성 강화

내실 있는 복지학교 진행, 정기적 뉴스레터 발간을 통한 복지지지층 확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사회권에 대한 국내외적 문제제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한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보장제도, 근로빈곤대책, 실업대책 등 대안정책 마련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조명하는 집중 캠페인, 입법활동 전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대안담론 구체화

현장을 가까이 - 희망복지리포트 발간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을 넘어 복지현장을 생생히 담은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

기관방문, 당사자 및 관련 활동가 인터뷰, 표적집단면접(FGI) 진행

관련 제도, 통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참여연대의 대안을 모색함

보육료 관련 영유아 부모들과의 표적집단면접(FGI), 경제위기 이후 늘어나는 노숙실태, 갈 곳 없는 빈곤아

동 문제 등을 다룰 예정

희망일꾼 만들기 - 내실 있는 복지학교 운영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권리로서의 복지를 공론화, 복지운동의 지지기반 확대 모색

대학생 대상의 강의, 현장체험, 캠페인 등으로 진행

진보적 이념과 철학에 기초한 사회복지의 역사와 이념, 각 제도의 취지와 현실을 담은 교재를 만들고 단행

본으로 출간할 예정

기본권을 이야기합시다 - 사회권 사업

주거권, 건강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의 현주소와 대안을 담은 시리즈 보고서 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 이행사항 모니터 보고서 발간

3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반박보고서 작성 및 현지 로비활동

한국정부의 사회권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도) 비준 촉구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

연금제도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상설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운동, 연기금운용 대안모색 프로젝트 진행

공공부조 : 최저생계비 상대적 계층방식 도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 촉구

보건의료 : 민간보험 집중모니터, 의료민영화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운동

서비스 : 보육바우처 시범사업 모니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

복지예산 : 경제위기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및 2010년 복지예산 모니터링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경제위원회

각종 규제완화로 인한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문제 감시활동 강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현황 조사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현상 감시

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저지 활동 지속

정부차원의 건설사, 중소기업 구조조정 정책 모니터

재벌, 대기업 2, 3세로의 부의 세습 보고서 발표

경제관료 및 부처인사 모니터 활동

중소기업 문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 실태 드러내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 검토

온라인 시민경제교실 활성화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 정부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배분의 합리성·적절성 문제제기

권력감시분야

청와대의 일방적 국정운영 감시하고
공안기관 강화를 막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정감시센터

청와대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활동
대운하를 축으로 한 건설-삼질경제 운용에 대한 문제제기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의 준동 감시

권력위의 권력 청와대 감시운동

청와대에 대한 밀착 감시, 정보공개와 언론 모니터를 통해 정리, 발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련 법 준수여부 모니터
청와대 예산과 대통령의 거짓말, 일구이언 등 주요 발언 모니터링

토목사업 추진 세력 감시

4대강 정비사업과 경인운하 등 토목사업 추진세력 감시활동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공조하되 참여연대 고유 감시 활동 진행
4대강 사업 추진세력 보고서, 4대강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 14조원 예산의 수혜자 조사 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폭로 등 조사발표

국정원 강화 5대악법 저지 및 국가정보원/경찰 감시 활동

경찰과 국정원 등 공안기구의 권한남용, 직권남용 사례 모니터링
국정원 권한강화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률안 통과 저지활동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과 처벌 촉구활동

검찰과 법원의 퇴행을 막기 위한
사법감시 활동을 복원하겠습니다

사법감시센터

민주적 법치와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 감시
인권과 민주적 법치를 신장하기 위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 감시
공익과 민주적 법치, 사법개혁의 관점에서 변호사단체 활동 평가
국민참여재판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사법개혁 안착을 위한 제도운영 과정 모니터
사법분야 전문감시 기구로서 충실한 조사보고서 발행 및 책자 발간
시민의 법률서비스 이용편의 증진 활동

검찰 감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백서> 발행 등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차 검찰의 사건 수사 모니터
10년 동안 검찰이 처리한 주요 사건과 담당자, 지휘자를 망라한 자료실 구축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 등 '검찰 민주화' 과제 연구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결정) 감시

월 1회 내외 대중성과 연속성을 갖는 판결 비평 활동 재개
연말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사업 복원

변호사단체 활동 평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맞춘 공익과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변협 분석, 평가 활동
외국 사례 비교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처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활동 평가

사법개혁 안착을 위한 제도운영 과정 모니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방청활동과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발굴 활동 유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관련한 '변호사 자격 취득의 경제적 장벽' 실태와 개선 활동

조사보고서 발행 및 도서 간행

연간 5회 내외의 내실있는 조사보고서(이슈리포트) 발행
발행한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단행본 도서 및 대중교양서 발간

시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변호사윤리 관련,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도록 변호사징계정보 웹페이지 개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일본변호사단체 초청행사 진행

기타

퇴직 대법관과 법원장들의 최종 근무법원 사건 수임 자제 요청
대법관 전원 교체에 따른 대법원 보수화 및 과거 회귀적 인선 견제

민주주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익법센터

표현의 자유 영역 확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각종 악법 저지

공익소송 통해 로스쿨 세대들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

표현의 자유 침해 대응

방송의 독립성 관련, 방송심의제도의 위헌성 문제제기 및 공익소송 진행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의 역사교과서 수정 명령에 대한 대응 활동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인터넷실명제확대,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등)와 법개정 시도 저지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

예비 법조인에게 변호사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 전개
주요 대학 로스쿨과 연계하여 공익법 포럼 개최
사법연수원생 법률봉사활동 지속

공익소송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기획소송 진행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익소송 기획

**서민경제 살리고, 민주주의 후퇴 막기 위해
국회를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의정감시센터

서민경제 살리고, 민주주의 후퇴 막기 위한 국회 대응 전략 수립
국회의원 발의법안, 상임위 모니터링 강화
열려라국회 DB자료 다양화, 의원모니터링 자료 생산
민주주의 참여교육 모형 개발
2기 정치개혁운동 준비

민생, 민주주의 관련 국회 대응 활동

회기별 참여연대 대국회 사업 전략 수립 및 핵심 캠페인 기획
정기적으로 민생경제, 민주주의, 기본권 관련한 의원발의 법안 모니터링
주요 입법 논의나 의원 활동에 관한 감시자료 생산하여 국회 대응 입체화

국회의원 발의법안, 상임위 모니터링 강화

주요 현안 관련 상임위 회의 모니터링

함량미달, 건수 올리기 법안발의 적발하여 공개

열려라국회 업그레이드

의원 당내활동, 후원금과 백지신탁, 선거정보, 정당자료 구축하여 DB자료 다양화
네티즌과 의원실을 연결하여 쌍방향 소통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
유료 정보자료 개발하고, 언론, 학계 등 판로 확보

민주주의 교육

교사 직무연수용 민주주의 참여교육 모형 개발

2기 정치개혁운동 준비

정당 및 의회와 국민 간의 민주적 소통 방안 마련
유권자의 정치 및 선거참여 확대 방안 논의
예산 감시체계 마련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외교를 감시하겠습니다**

평화군축센터

남북관계 악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비증있는 논평과 대북정책 전환 촉구
감시받지 않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외교활동 모니터링
불요불급 무기도입 및 개발사업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전개
국제분쟁과 정세에 관한 콘텐츠의 다각화와 대중적 글쓰기 강화

한반도 평화관련 현안 대응

한반도 정세 모니터링, 대북정책 전환 촉구 활동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지전비용 전용 저지활동
실질적 개선방안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 저지 활동

감시받지 않는 국제무대에서의 한국 외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평화인권 외교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 정책 결정 및 활동실태 보여주기
핵군축, 심대한 인권유린, 국가간 분쟁, 대량살상 무기거래, 개발 및 사용 등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와 한국 정부 입장과 관련 정책 조사
정보공개 활동을 포함한 자료수집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평화·국제분야

국방정책 관련 집중 모니터링 체계 마련

국방개혁 후퇴 기조 및 정책 모니터링

불요불급한 무기와 대폭 삭감 가능한 국방예산 항목 선정

무기의 위험성, 비효율성을 알리는 콘텐츠 생산, 대중적 홍보활동, 이슈리포트 발표

국감 의제 발표, 국감 집중 모니터

국제분쟁 모니터링과 한국군 파병정책 밀착감시

이스라엘 전쟁범죄와 팔레스타인 정세 모니터링 지속

이라크, 소말리아 정세 모니터링 지속

아프가니스탄 파병 및 레바논 평화유지군(PKO) 파병 대응

유엔평화유지군(PKO)부대 설치 시도 관련 입법 대응 및 각국 현황 조사

시민교육과 출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관련 대중 강연과 직접평화 행동 기획

평화백서 출간 작업

영화로 보는 전쟁과 평화(가제) 진행

2009 평화학교 진행

주요 국내외 평화연대 활동

MD((미사일방어체제)와 군비경쟁에 반대하는 국제대회 공동주최 (4월)

동북아 국방비 동결 국제캠페인 진행(4-5월)

핵확산방지협약(NPT) 검토회의 참가 및 집중 모니터링 (5월)

2009 평화활동가 대회 공동주최

국제무대에 참여연대 활동을 알려나가겠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공적개발원조(ODA) 법제화 모니터링과 공론화

아시아 담론형성과 이해확산에 기여

국제 네트워크 강화, 국제기구 적극 활용 통해 참여연대 활동의 국제화 지원

아시아 이해를 위한 대중사업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조명하는 연속기획 아시아포럼(영유권, 난민 등 인권, 에너지, 식량위기, 국경주변의 문제 등)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후속작업으로 출판과 연계

칼럼(아시아 생각)은 지속하되 아시아 현지인의 비율을 높이는 등 필자 다각화

공적개발원조(ODA) 대응

ODA 법제화 관련 법안, 상임위 활동 모니터링

선진공여국의 법제를 점검하는 내부워크숍 운영

정책보고서 발간, 정책포럼과 언론기획 추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관련 정부 정책 및 활동 감시

ODA 전문가 뉴스레터 발간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 지원

참여연대 국제연대 전략수립 및 국제기구, 네트워크 등 활용방안 모색

참여연대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채널, 네트워크 조사

참여연대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콘텐츠 강화 등 영문 블로그 업데이트

더 깊고 더 단단하게, 회원-시민 속으로 뿌리내리는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튼튼한 회원 구조를 위한, 회원 서비스와 소통 체제 보완

다양한 회원참여 프로그램 기획과 다각적인 회원확대 활동

회원참여 분야

신입회원한마당 홍보 강화, 수도권 회원 대상으로 분기별로 찾아가는 행사 진행

회원들의 주체적인 기획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창립기념행사 전환

회원한마당을 회원들의 공부, 교류, 모임결성의 계기가 되도록 구성

회원 참여에 관한 의견 수렴과 설문이 가능하도록 서버 기능 개발

활기차 활성화를 통한 상시적 회원소통

회원서비스 강화

성실회원의 재정참여에 대한 감사인사 확대

가입 연차별 감사 우편물 강화, 조강지기(11년차 이상)에게 별도 편지, 십년지기(10년차, 올해는 98년도 회원)에게 감사편지와 기념품 발송

회원정보시스템 기능강화

회원확대

회원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인적 역량을 별도로 배치

시민교육, 문화행사 등을 매개로한 회원확대 방안 모색

시민참여분야

회원확대 서포터즈와 같은 활동모임 강화

자원활동 분야

운영매뉴얼 완성, 데이터베이스 일상적 점검

부서별 수요 조사 정례화로 자원활동 인프라 정비

전문 자원활동가 그룹과 일반 자원활동가 확보 방안 수립

커뮤니케이션 분야 : 홍보/인터넷/피플티비/참여사회

참여연대 문턱낮추기: 홍보물, 블로그 등 일상적 소통망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활성화

참여연대에 대한 오해 풀기: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한 적극적 대응

참여연대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통로 마련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시민교육을 선보입니다

시민교육센터(가칭)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한 시민교육 본격화

진보, 인문, 행복을 결합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교육콘텐츠 기획

시민사회 대표적 시민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인프라 마련

시민과 어우러지고 미래 참여연대 회원과 만나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민주주의, 인문 교육

민주주의 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단계적/지속적인 학습. 경제교실, 정치사회 교실

인문학 교육 : 고전, 인문, 현실을 접목시킴으로써 현실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통합적 학습

생활민주주의 교육: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생태평화적인 삶, 진보적인 주체 등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교육

상상력을 위한 세미나

가로세로강좌 :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상상력을 키우는 강좌

굿모닝세미나 : 일상과 관련된 주제로 지역주민과 시민들과의 만남 시도 지속

교육콘텐츠 생산자

〈열정세대 : 상상력과 용기로 세상을 바꾸는 10대들 이야기〉에 이어 청소년/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콘텐츠 생산 지속

참여연대 활동부서 교육 지원

교사 직무연수, 복지학교, 평화학교 등 부서별 시민교육 활동 지원

안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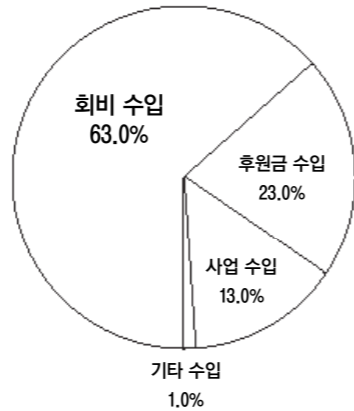
2008결산

2009예산

2008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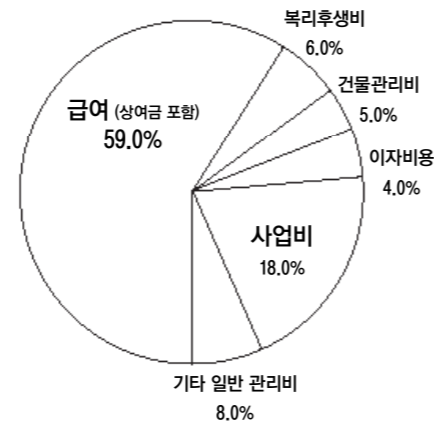
수입	단위 : 원
회비 수입	958,271,123
후원금 수입	343,215,074
사업 수입	195,693,740
기타 수입	14,839,450
총계	1,512,019,387

※ 부설기관 회비수입 제외 (손익계산서에는 상계처리함)



지출	단위 : 원
급여(상여금 포함)	847,306,507
복리 후생비	83,982,785
건물 관리비	69,351,954
이자 비용	55,894,249
사업비	260,210,053
기타 일반 관리비	117,615,761
총계	1,434,361,309

※ 통인동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2008년 한 해 동안 5천 5백여만 원 지출되었으며, 총 8억 원의 대출금 중 1억 5천 만 원을 상환하여 현재 남은 대출금은 6억 5천 만 원입니다.



대차대조표

제15기 :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14기 :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단위 : 원)	
	제 15 (당) 기 금 액	제 14 (전) 기 금 액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제외]		
자 산		
I. 유동자산	335,434,536	462,661,654
(1) 당좌자산	335,434,536	462,661,654
1. 현금	2,862,750	7,318,540
2. 보통예금	273,283,163	264,346,722
3. 상근자교육기금	32,338,040	94,262,568
4. 연대기금	3,339,661	29,298,672
5. 퇴직기금	-	64,094,471
6. 도시락기금	3,909,468	3,340,681
7. 참여사회기금	19,701,454	-
II. 비유동자산	4,228,033,526	4,228,033,526
(1) 투자자산	177,810,266	177,810,266
1. 장기대여금	177,810,266	177,810,266
(2) 유형자산	4,050,223,260	4,050,223,260
1. 토지	2,634,664,824	2,634,664,824
2. 건물	1,415,558,436	1,415,558,436
(3) 무형자산	-	-
(4) 기타 비유동 자산	-	-
자산총계	4,563,468,062	4,690,695,180
부 채		
I. 유동부채	24,066,402	26,501,352
1. 예수금	20,219,162	21,961,352
2. 부가세예수금	3,847,240	4,540,000
II. 비유동부채	690,000,000	894,094,471
1. 장기차입금	650,000,000	800,000,000
2. 퇴직급여충당금	-	64,094,471
3. 장기임대보증금	40,000,000	30,000,000
부채총계	714,066,402	920,595,823
자 본		
I. 자본금	3,849,401,660	3,770,099,357
1. 자본금	3,849,401,660	230,161,892
2. 출연금	-	144,195,330
3. 보금자리출연금	-	1,705,805,295
4. 임의적립금	-	491,839,627
자본총계	3,849,401,660	3,770,099,357
부채와자본총계	4,563,468,062	4,690,695,180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 제외]

(단위 : 원)

손익계산서

제15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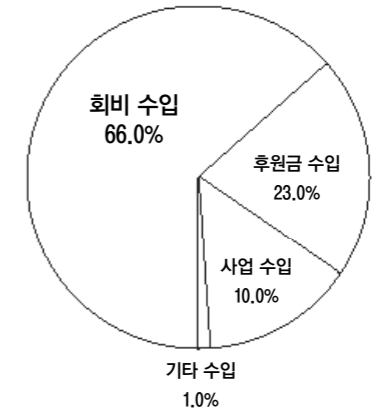
제14기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과 목	제 15 (당) 기		제 14 (전) 기	
	금 액		금 액	
1. 매출액		1,524,510,937		1,560,517,133
1. 회비수입	985,602,123		982,672,049	
2. 정기후원금수입	6,000,000		22,040,620	
3. 부정기후원금수입	337,215,074		353,953,848	
4. 사업수입	195,693,740		201,850,616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1,524,510,937		1,560,517,133
IV. 판매비와관리비		1,400,379,060		1,307,270,992
1. 급여	750,532,090		640,530,530	
2. 상여	96,774,417		103,920,835	
3. 잡급	-		2,178,750	
4. 퇴직급여	-		12,217,491	
5. 복리후생비	83,982,785		69,425,853	
6. 여비교통비	3,073,541		1,397,060	
7. 통신비	31,062,250		31,361,160	
8. 수도광열비	1,658,080		3,393,440	
9. 전력비	17,306,100		6,644,400	
10. 세금과공과금	15,405,410		10,620,600	
11. 임차료	6,513,324		71,930,212	
12. 수선비	4,428,000		20,324,400	
13. 보험료	1,168,100		938,960	
14. 차량유지비	4,918,800		2,300,000	
15. 교육훈련비	16,758,310		24,489,290	
16. 도서인쇄비	6,120,100		4,138,670	
17. 회의비	8,826,510		8,523,330	
18. 사무용품비	8,231,960		12,620,740	
19. 소모품비	17,913,130		6,724,250	
20. 지급수수료	21,381,350		42,187,471	
21. 보관료	-		776,000	
22. 광고선전비	-		220,000	
23. 건물관리비	8,384,200		11,273,892	
24. 잡비	3,508,750		1,614,631	
25. 사업비	260,210,053		183,474,543	
26. 발송비	4,890,800		7,530,484	
27. 부설기관회비등	27,331,000		26,514,000	
V. 영업이익		124,131,877		253,246,141
VI. 영업외수익		14,839,450		28,740,490
1. 이자수익	5,684,879		20,533,593	
2. 잡이익	9,154,571		8,206,897	
VII. 영업외비용		61,313,249		51,824,739
1. 이자비용	55,894,249		48,886,955	
2. 기부금	3,880,000		2,930,000	
3. 잡손실	1,539,000		7,784	
VIII. 당기순이익		77,658,078		230,161,892

2009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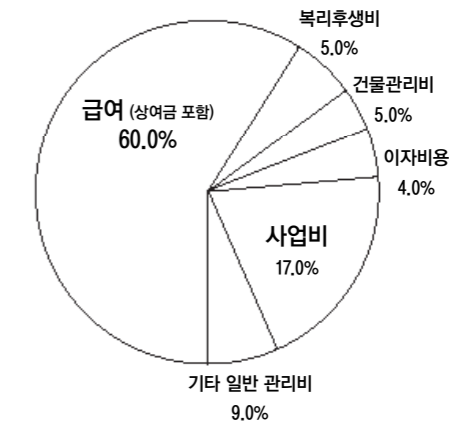
수입 단위 : 원

회비 수입	1,000,000,000
후원금 수입	350,000,000
사업 수입	155,000,000
기타 수입	15,000,000
총계	1,520,000,000



지출 단위 : 원

급여(상여금 포함)	910,000,000
복리 후생비	84,000,000
건물 관리비	70,200,000
이자 비용	56,000,000
사업비	258,600,000
기타 일반 관리비	141,200,000
총계	1,520,000,000



손익계산서(예산)

제16기 :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참여연대 전체 [부설기관제외] (단위 : 원)

과 목	제 16 기	
	금 액	
I. 매출액		1,505,000,000
1. 회비수입	1,000,000,000	
2. 후원금수입	350,000,000	
3. 사업수입	155,000,000	
II. 매출원가		
III. 매출총이익		1,505,000,000
IV. 판매비와관리비		1,460,000,000
1. 급여	780,000,000	
2. 상여금	130,000,000	
3. 복리후생비	84,000,000	
4. 여비교통비	3,000,000	
5. 통신비	32,000,000	
6. 수도광열비	1,700,000	
7. 전력비	17,000,000	
8. 세금과공과금	16,000,000	
9. 임차료	7,000,000	
10. 수선비	4,000,000	
11. 보험료	1,200,000	
12. 차량유지비	2,000,000	
13. 교육훈련비	17,000,000	
14. 도서인쇄비	6,000,000	
15. 회의비	9,000,000	
16. 사무용품비	8,500,000	
17. 소모품비	17,000,000	
18. 지급수수료	21,500,000	
19. 건물관리비	8,500,000	
20. 잡비	3,000,000	
21. 사업비	258,600,000	
22. 발송비	5,000,000	
23. 부설기관회비등	28,000,000	
V. 영업이익		45,000,000
VI. 영업외수익		15,000,000
1. 이자수익	6,000,000	
2. 잡이익	9,000,000	
VII. 영업외비용		60,000,000
1. 이자비용	56,000,000	
2. 기부금	4,000,000	
VIII. 당기순이익		

안건 ③

2009 임원인선안

2009 임원인선안

*굵은 글씨 : 신임 임원

공동대표

임종대(교수, 한신대 사회복지학) 청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감사

윤형근(회계사)

고문

김중배(언론인) 김창국(변호사) 명진(스님) 박상중(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은정(교수, 서울대 법학)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오재식(아시아교육연구원장) 이삼열(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이선종(원불교 서울교구장) 임현영(민족문제연구소장) 장임원(민주화운동공제회 이사장)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명예이사장) 최영도(변호사) 홍성우(변호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순성(교수, 동국대 북한학과)

부위원장: **진영중(교수, 성공회대 영어학과)**

당연직 운영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박순성(운영위원장) **진영중(운영위 부위원장, (가칭)시민교육센터 원장 겸임) 김진욱(집행위원장) 홍성태(집행위 부위원장) 김기식(정책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교수)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대 교수)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교수)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회계사)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서울시립대 교수) 김창준(행정감시센터 공익제보지원단장, 변호사) 이광수(행정감시센터 정보공개사업단장, 변호사)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소장,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태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교수) 김남근(민생****

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이현옥(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변호사) 손혁상(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양윤재(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전상직(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강원대 교수) **한승호(회원모임협의회 회장) 홍의표(회원모임 참종다) 허지현(회원모임 청년마을)**

선출직 운영위원

김상균(방송인) 김성희(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 김영수(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김영태(사업가) **김철희(전 회원모임협의회 회장) 맹행일(자원활동가) 박상철(직장인) 박상필(교수, 성공회대 NGO대학원) 박진호(직장인) 방정균(교수, 상지대 한의학) 변희욱(의사) 석락희(직장인) 성승택(직장인) 송영준(대학생) 안정희(자영업) 오세중(변리사) **윤형준(직장인) 이상미(교수, 장안대 행정학) 이상운(의사) 이선노(사업가) 이적(목사) 이준한(교수, 인하대 정치학) 이찬진(변호사)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 이희영(교수, 대구대 사회학) 장연희(자원활동가) **장정아(자원활동가) 정건화(교수, 한신대 경제학) 조룡상(직장인) 주진오(교수, 상명대 사학과) **채명목(자원활동가) 최태욱(교수, 한림대 국제관계학) 최현(교수, 제주대 사회학) 퇴휴(스님, 무진법장사) 하승수(교수, 제주대 법학) 하원상(직장인) 한명희(자영업) **허필두(직장인) 홍천희(자원활동가)**********

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진욱(변호사)**

부위원장: 홍성태(교수,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당연직 집행위원

임종대(공동대표) 청화(공동대표) 차병직(정책자문위원장) 박순성(운영위원장) **진영중(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가칭)시민교육센터 원장) 김진욱(집행위원장) 홍성태(집행위 부위원장) 김기식(정책위원장) 김민영(사무처장) 박원석(협동사무처장) 이태호(협동사무처장) **조성대(의정감시센터 소장) 하태훈(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경신(공익법센터 소장) 김진방(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최영태(조세개혁센터 소장) 경건(행정감시센터 소장) 구갑우(평화군축센터 소장) **이태수(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훈(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남근(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현옥(민생희망본부 정책사업단장) 손혁상(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양윤재(재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소장) **한승호(회원모임협의회 회장)********

선출직 집행위원

김정인(교수, 춘천교육대) 이남주(교수, 성공회대 중국학) 이상훈(변호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차병직(변호사)

부위원장: 조희연(교수, 성공회대 통합대학원 원장)

정책자문위원

김균(교수, 고대 경제학) 김연명(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 김호기(교수, 연세대 사회학) 박진도(교수, 충남대 경제학)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호성(교수, 서강대 정치외교학) 백종만(교수, 전북대 사회복지학) 윤상철(교수, 한신대 사회학) 장하성(교수, 고려대 경영학) 조국(교수, 서울대 법학) 조흥식(교수, 서울대 사회복지학) 한인섭(교수, 서울대 법학) **한상희(교수, 건국대 법학)**

정책위원회

위원장: 김기식

사무처장

김민영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이태호

부록

정관
기구표
노래

참여연대 정관

- 1994. 09. 10. (제정)
- 1995. 03. 23. (1차 개정)
- 1996. 03. 13. (2차 개정)
- 1996. 09. 10. (3차 개정)
- 1997. 09. 27. (4차 개정)
- 1999. 02. 06. (5차 개정)
- 2000. 02. 19. (6차 개정)
- 2001. 02. 10. (7차 개정)
- 2002. 02. 23. (8차 개정)
- 2003. 03. 15. (9차 개정)
- 2005. 03. 12. (10차 개정)
- 2006. 02. 25. (11차 개정)
- 2006. 09. 13. (12차 개정)
- 2007. 03. 03. (13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이 모임은 '참여연대'라 한다.

제2조 [목적]참여연대는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현되는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참여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민주사회를 바르게 세우며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방법에 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사 형성을 위한 사업
2.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3. 인권을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노력
4.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

여 사회정의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 행동

5.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교육
6. 기타 참여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5조 [소재]참여연대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 가입]

- ① 참여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② 가입절차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2. 참여연대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참여연대의 정관과 내규를 지킬 의무
2. 참여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자격 상실]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모임협의회]

- ① 참여연대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참여연대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1조 [지위]총회는 참여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제12조 [소집]정기총회는 연 1회 열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는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정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직 운영위원의 선출, 당연직 운영위원의 승인
 4. 고문의 추대와 감사의 선임
 5. 결산, 예산과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 ③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④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참여연대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15조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운영위원과 정관에 정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16조 [임기]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소집]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8조 [의결]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권한]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약간 명의 부위원장, 정책위원장단과 선출직 집행위원을 선출하며, 집행위원장이 제청하는 당연직 집행위원과 각 활동기구의 임원을 임명한다.

제3절 집행위원회

제20조 [지위]집행위원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정관에 명시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상설 기구이다.

제21조 [구성]

-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기 1년의 선출직 집행위원과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집행위원은 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활동기구의 장, 각 부설기관의 장, 정책위원장, 정책자문위원장, 사무처장, 협동사무처장, 회원모임협의회 대표로 구성한다. 단,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하는 각 활동기구와 부설기관의 장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한다.

제22조 [임기]집행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정책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집행위원회를 둔다.
- ④ 상임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절 공동대표, 고문, 감사

제24조
[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참여연대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5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
[고문]공동대표, 운영위원장단, 집행위원장단으로 활동한 전직 임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참여연대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5절 정책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제27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참여연대의 정책과 연구 사업을 담당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약간 명의 부위원장, 실행위원과 산하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제28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참여연대의 정책을 비롯한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활동기구]
① 참여연대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각 활동기구는 참여연대의 목적과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처]
① 참여연대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1조
[사무처장]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
[협동사무처장]사무처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둘 수 있고, 그 인준절차와 임기는 사무처장과 같다.

제6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3조
[지역조직]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4조
[부설기관]참여연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35조
[회계 연도]참여연대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예산과 결산]
① 집행위원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계 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입]참여연대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 5 장 해 산

제38조
[해산 사유]참여연대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9조
[해산 절차]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산을 결정한다.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0조
[잔여 재산의 귀속] 참여연대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참여연대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시킨다.

제 6 장 보 칙

제41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① 주요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임원의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제42조
[준용 규정]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② 내규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창립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3월 1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6년 9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27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2월 6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2월 19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1년 2월 10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2년 2월 2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3년 3월 1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12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6년 9월 13일 임시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3일 정기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참여연대 기구표

2009. 2. 21. 현재



참여연대 노래

박원순 작사 / 지근식 작곡

1.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아름답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2.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정의롭고 맑고 깨끗해진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시민들의 목소리로 참여연대
 시민의 권익은 우리가 지키자

3.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모였다
 희망 속에 서로 의지하는 세상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다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 마침내 큰 강물 이룬다

후렴
 참여하자 연대하자 그 꿈 우리 함께 이루기 위해
 참여하자 연대하자 아름답고 밝은 세상 이루기 위해

